

시 정 질 문 서

【서강진 의원】

첫 번째,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1.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한을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부천시 뉴타운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미 구역지정이 끝난 지금 구역지정의 변경 및 용적을 상향 등을 부천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법 개정 후 세입자의 영업보상이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세입자 보호측면에서는 반가울 일이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칫 내 집만 빼앗기는 뉴타운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3. 여러 곳의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고 주민총회를 속속 마치고 있으나 주민의 직접 권리행사보다는 간접방식인 서면동의로 일사천리로 총회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회 이후 추진위원장 등 직원의 급료 및 정비업체 선정과 설계업체 선정 등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을 하던 안하던 비용발생은 주민의 부담으로 안고 갈텐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안 될 시 늘어만 가는 비용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지정을 해주었으니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재개발을 하라는 식의 재개발이 되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이를 낳았으면 보살피고 가꿔 잘 키워야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무관심속에 방치하는 것은 이후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을 지도해 가는 관심 속에 세입자나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만족을 기할 수 있는 뉴타운 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총회기 끝나고 이후 조합설립을 하기위하여 조합설립총회를 하게 될 텐데 조합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시 정비업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형식의

서면동의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조합설립총회 시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부재자 투표소를 만들어 직접투표를 하도록 관리지침을 만들고 선관위에 부탁하는 방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합설립을 하도록 하고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 투명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의 의향은?

5. 구역지정 후 사업구역이 협소하거나 용적률이 적어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구역은 어떻게 사업성을 보완해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동남우회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수대로가 조기 개통된다면 차량의 분산으로 완화되리라 생각되지만 범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계수대로 개통이 늦어지는 관계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수대로가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제 보상이 마무리되어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면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동남우회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자율방범초소는 일부 초소를 제외하고 한전의 협조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 요즘 한전에서 단전 조치하겠다는 통보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한전과 협의하여 초소에 계량기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해주어 자율방범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원시간 국철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연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진행계획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